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및 정부지원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경옥* · 손희정** · 오웅락***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고, 기업규모와 인증유형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의 관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가 정부지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를 연구기간으로 하고 226개 기업/연도의 사회적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채비율과 정부지원금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자산회전율은 높을수록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경제적성과는 취약계층고용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규모와 인증유형의 차이가 경제적성과의 사회적성과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모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가 정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은 낮아지고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시된 사회적기업들의 실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가 정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회적기업,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정부지원금,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chenghac@naver.com, 주저자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oor@ssu.ac.kr, 교신저자

I. 서 론

본 연구는 최근 양적으로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영리적 특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회계학적인 연구가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취업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영리기업처럼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즉,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적 목적인 사회적 성과와 영리적 목적인 경제적 성과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16일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1,856개에 이른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재무정보의 제공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설문조사에 근거한 연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율 공시된 실제 재무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보다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지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성과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목적인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정부지원금과 경영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첫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서 경제적성과는 실제 재무제표에 근거한 재무비율들로 측정할 것이며, 사회적성과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취약계층고용비율은 물론 사회적기업 자체적인 취약계층의 고용정도를 측정한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성과에 정부지원금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이 취약계층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기업규모의 차이와 인증유형의 차이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가 정부지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계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제Ⅴ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1. 선행연구의 검토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기업의 역할,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측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므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특성들이 경제적성과 및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장영란·홍정화·차진화(2012)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경제적성과 및 사회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분석결과 최고경영자와 종업원의 역량, 회계시스템의 운영 등은 경제적성과는 물론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욱·조성익(2015)는 사회적기업에서 기업가의 특성과 역량이 경제적성과 및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의 관리적역량, 마케팅역량 및 경험은 경제적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며, 기업가의 혁신성, 위험감수성향, 마케팅역량, 경험과 사회문제는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철(2015)은 다른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율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유급근로자 수와 교육훈련비는 경제적성과인 당기순이익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순자산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급근로자 수와 외부지원금은 사회적성과인 취약계층 고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교육훈련비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연·김선구(2016)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분석결과 조직형태, 기업규모와 자본이 경제적성과인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정부지원금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지원금이 경제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자립성과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직형태, 인증기간과 정부지원금은 사회적성과인 취약계층고용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급근로자수와 공시횟수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은영·변병설(2017)은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분석결과 의사결정구조인 노사협의회의운영은 경제적성과인 매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위원회공식절차는 사회적성과

인 취약계층 고용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지원은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와 사회적성과 및 경제적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최조순·강병준(2012)은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및 경제적성과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형태별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성과인 취약계층고용비율은 경제적성과인 기업수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업수익률은 총노무비를 총수입비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이용탁·주규하(2014)는 사회적기업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이 경제적성과 및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조직몰입은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조직몰입은 Aranya et. al.(1986), Blau and Boal(1987), O'Reilly and Chatman(1986)에 근거하여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동일시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홍효석·김예경(2016)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인증유형, 의사결정구조와 지원금 등이 사회적성과 및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다른 유형보다 사회적성과인 취약계층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금은 취약계층고용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성과인 영업이익에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인 한영규(2016)는 사회적성과, 조직형태와 기업지배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분석결과 사회적성과인 취약계층고용비율이 경제적성과인 당기순이익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처럼 구분되지는 않지만, 관련성이 높은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선남이·박능후(2011)는 사업기간, 월평균급여와 최고경영자 정보 등이 사회적성과인 순이익, 정규직비율과 취약계층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월평균급여가 많을수록 취약계층고용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준규(2012)는 정책 도구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및 경제적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성과에서 정부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인증시기, 조직유형과 총수입 규모 등이 경제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특성들이 사회적성과 및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시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연구가설의 설정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영업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회적기업의 특성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회적성과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바 있으나, 두 가지 목적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한영규(2016)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한영규(2016)는 사회적성과인 취약계층고용비율이 경제적성과인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주된 목적인 취약계층고용비율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는 측면과 기업규모가 통제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제적성과(경영성과인 재무비율과 정부지원금비율)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인과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내부의 자체적 노력의 성과인 재무비율과 기업외부의 지원효과인 정부지원금 중에서 어떤 요소가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 I 을 설정한다.

가설 I :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는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김숙연·김선구(2016)에서 기업규모인 총자산은 경제적성과인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I 에서 비율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업규모는 통제되지만, 경제적성과가 수치(Level)변수로 사용될 경우에 기업규모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비선형적 증가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율정보만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기업규모를 총자산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며, 기업규모가 큰 상위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집단을 2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고자 가설 II를 설정한다.

가설 II :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인증유형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및 지역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로 사회적기업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이 주된 목적인 일자리제공형은 비일자리제공형보다 취약계층고용비율이 실제로 높기 때문에¹⁾, 일자리제공형과 나머지 유형들 간에는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Ⅲ을 설정한다.

가설 Ⅲ : 인증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다.

넷째, 김숙연·김선구(2016)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성과 및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은 경제적성과인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효석·김예경(2016)에서도 정부지원금은 경제적성과인 영업이익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그 효과가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기업규모와 경영성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히 공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이 어떤 경영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중 어떤 요소에 근거하여 지급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가설Ⅳ을 설정한다. 다만, 선행연구들이 정부지원금의 규모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금 대신에 정부지원금비율을 사용할 것이다.

가설 Ⅳ :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는 정부지원금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Ⅲ. 연구방법의 설계

1. 연구모형과 변수정의

첫째, 가설 I(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는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식(1)과 식(2)처럼 종속변수를 사회적성과인 ‘취약계층고용비율’과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로 정의하고 독립변수를 경제적성과인 경영성과(재무비율)와 정부지원금비율로 정의한²⁾ 모형 I 과 모형Ⅱ를 적용한다.

-
- 1) 일자리제공형의 취약계층고용비율의 평균값은 62.86%로 비일자리제공형의 평균값인 49.8%보다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차이분석결과 나타났다.
 -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사회적성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취약계층고용비율과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로 정의하며, 경제적성과는 경영성과인 재무비율과 정부지원금비율을 포함한다.

$$\text{모형 I : } VR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beta_5 SFR + \epsilon \quad (1)$$

VR : 취약계층고용비율(=취약계층 고용인원/전체 고용인원 $\times 100$)

DR : 부채비율(=부채/총자산 $\times 100$)

ROE :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순자산(평균) $\times 100$)

SGR :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times 100$)

ATR :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평균))

SFR : 정부지원금비율(=정부지원금/총자산 $\times 100$)

$$\text{모형 II : } SVR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beta_5 SFR + \epsilon \quad (2)$$

SVR :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취약계층 자체고용인원/취약계층 고용인원 $\times 100$)

모형 I 에서 종속변수인 취약계층고용비율은 선남이·박능후(2011), 최조순·강병준(2012), 김숙연·김선구(2016), 홍효석·김예경(2016), 전은영·변병설(2017) 등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성과의 대응치로 사용된 바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고용비율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중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용하는 자체고용인원을 반영한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을 사회적성과로 정의한 모형 II 를 이용하여 추가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경제적성과의 경우에, Rai et al.(2006), Yao et al.(2007), 장성희·반성식(2010), 이용탁·주규하(2014), 홍효석·김예경(2016)처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수익과 이익정보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와 김숙연·김선구(2016)와 전은영·변병설(2017)과 같이 매출액영업이익률 또는 매출액순이익률 등의 이익의 비율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특히 최홍근·유연우(2013)는 경제적성과를 성장성지표(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지표(총자본 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안정성지표(부채비율, 정부지원금 의존도) 등 세부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최홍근·유연우(2013)처럼 지표별 대표 재무비율을 경제적성과로 정의하고자 하며³⁾, 구체적으로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과 정부지원금비율을, 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성장성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을, 마지막으로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모형 I 과 모형 II 에서 부채비율은 사회적성과(취약계층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사회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바 없으나 총자산회전율도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보여주므로 유의한 양(+)의 값을 기대하며, 김희철(2015)과 김숙연·김선구(2016)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비율도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일

3) 경제적성과를 수치(Level)변수로 사용할 경우에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경제적성과도 높게 나타나므로,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성과 때문인지 기업규모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규모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경제적성과를 비율(%)변수로 정의하였다.

것이다. 추가적으로 김희철(2015)처럼 취약계층고용비용 대신에 취약계층 자체고용인원을 직접 사용하거나, 김희철(2015)과 김숙연·김선구(2016)처럼 정부지원금비용 대신에 정부지원금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3)의 모형Ⅲ처럼 종속변수로 취약계층 자체고용인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독립변수로 정부지원금을 적용한 분석도 병행하고자 한다.

$$\text{모형Ⅲ : } SV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beta_5 SF + \epsilon \quad (3)$$

SV : 취약계층 자체고용인원, SF : 정부지원금

둘째, 가설Ⅱ(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도가 사회적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다.)를 검증하고자, 가설Ⅰ에서 사용된 모형Ⅰ과 모형Ⅱ를 기업규모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집단구분은 기업규모인 총자산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셋째, 가설Ⅲ(인증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도가 사회적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Ⅰ에서 사용된 모형Ⅰ과 모형Ⅱ를 인증유형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인증유형은 일자리제공형과 비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및 지역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한다.

넷째, 가설Ⅳ(사회적기업의 경영성도는 정부지원금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를 검증하고자, 식(4)처럼 종속변수를 ‘정부지원금비용’로 정의하고 독립변수를 재무비율들로 정의한 모형Ⅳ를 적용한다.

$$\text{모형Ⅳ : } SFR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epsilon \quad (4)$$

사전적으로 연도별 표본의 구성을 검토한 결과,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기간 중에서 2013년 이후의 표본이 전체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모형들에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할 경우에 특정 연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들은 동일한 기업이 연속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들이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도더미변수는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표본의 선정과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율 공시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269개 기업/연도이며, <표 1>과 같은 사유로 43개 기업/연도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26개 기업/연도가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표 1〉 표본선정

구 분			표본크기(기업/연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율 공시된 사회적기업			269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없는 기업			(14)		
자본잠식인 기업			(21)		
r-student의 절댓값이 2를 초과하는 기업(회귀분석 극단치)			(8)		
최종 표본기업			226		
Panel A : 인증유형별 빈도 ⁴⁾			Panel B : 연도별 빈도		
인증유형	빈도	백분율	인증연도	빈도	백분율
일자리제공형	169	74.78	2007~2012	70	30.97
사회서비스제공형	12	5.31	2013	45	19.91
혼합형	21	9.29	2014	49	21.68
기타형	14	6.19	2015	62	27.43
지역사회공헌형	10	4.42			
합 계	226	100.00	합 계	226	100.00

<표 1>에서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항목이며, 자본잠식인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과 다른 재무구조를 갖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표본기업을 인증유형별로 분석하면, 일자리제공형이 169개 기업/연도로 전체표본의 75%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표본이 69%를 점유하고 있다.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와 차이분석

<표 2>는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표 2>에서 사회적기업의 총자산의 평균값과 중위수는 각각 129억원과 35억원으로 표준편차(=507)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평균값과 중위수는 각각 16억원과 9억원으로 나타나며,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4개 기업/연도에 불과하였다.

-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①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②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③ 혼합형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④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을 계량화하기 힘든 유형이며 ⑤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단위	평균값	표준편차	1%	중위수	99%
총자산	억원	129	507	3	35	1,605
부채		67	329	0.4	15	530
순자산		61	217	0.8	13	916
매출액		290	1,735	9	62	3,205
당기순이익		9	30	-4	2	84
정부지원금		16	47	0	9	94
<i>VR</i>	%	59.56	18.31	12.30	60	100
<i>SVR</i>		54.99	40.47	0	57.14	100
<i>DR</i>		50.65	24.96	2.03	51.26	92.86
<i>ROE</i>		23.56	56.40	-131.65	15.32	206.09
<i>SGR</i>		85.43	577.99	-24.28	18.31	795.77
<i>ATR</i>		275.34	207.96	46.82	237.84	973.65
<i>SFR</i>		43.70	54.90	0	24.10	271.02

1) 전체표본크기 : 226개 기업/연도

2) *VR* : 취약계층고용비율(=취약계층 고용인원/전체 고용인원×100), *SVR* :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취약계층 자채고용인원/취약계층 고용인원×100), *DR* : 부채비율(=부채/총자산×100), *ROE* :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순자산(평균)×100), *SGR* :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ATR* :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평균)×100), *SFR* : 정부지원금비율(=정부지원금/총자산×100)

주요변수로 사용될 비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로 사용될 취약계층고용비율(=*VR*)은 취약계층 고용인원을 전체 고용인원으로 나눈 백분위로 평균값은 59.56%이며, 취약계층 자채고용인원을 취약계층 고용인원으로 나눈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SVR*)의 평균값은 54.99%로 두 비율의 평균값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부채비율(=*DR*)의 평균값은 50.65%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사기간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형배·전규안(2016)과 최웅용·김선화(2016)에서 부채비율의 평균값이 41%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나,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분석한 지승민·박종일·나경아(2017)에서 부채비율의 평균값이 5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매출액증가율(=*SGR*)의 평균값과 중위수는 각각 85.43%와 18.31%로, 지승민·박종일·나경아(2017)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의 평균값이 각각 9%와 7%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

이다. 또한 자기자본순이익률(= *ROE*)과 총자산회전율(= *ATR*)의 평균값은 각각 23.56%와 275.34%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이배(2012)에서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평균값이 각각 8%, 112.3%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재무위험인 부채비율은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기업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며, 그 이외 재무비율은 상장기업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상당부분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3>은 취약계층고용비용의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성과의 차이분석 결과로, 취약계층고용비용의 높고 낮음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 3> 취약계층고용비용의 차이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단위 : %)

변수	집단구분	표본 크기	평균	표준 편차	T검정 (t값)	윌콕슨 순위합(Z값)
<i>DR</i>	<i>VD</i> = 0	115	48.69	25.71	-1.20	1.11
	<i>VD</i> = 1	111	52.68	24.11		
<i>ROE</i>	<i>VD</i> = 0	115	23.49	60.04	-0.02	1.47
	<i>VD</i> = 1	111	23.64	52.65		
<i>SGR</i>	<i>VD</i> = 0	115	120.40	804.10	0.94	2.09**
	<i>VD</i> = 1	111	49.24	103.20		
<i>ATR</i>	<i>VD</i> = 0	115	273.00	184.30	-0.17	-0.03
	<i>VD</i> = 1	111	277.70	230.80		
<i>SFR</i>	<i>VD</i> = 0	115	48.01	58.57	1.20	-1.66*
	<i>VD</i> = 1	111	39.24	50.69		

1) 전체표본크기 : 226개 기업/연도

2) *DR* : 부채비율, *ROE* : 자기자본순이익률, *SGR* : 매출액증가율, *ATR* : 총자산회전율, *SFR* : 정부지원금 비율, *VD* : 취약계층고용비용이 중위수보다 높으면 0이고 아니면 1

3) **, *는 각각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표 3>에서 취약계층고용비용의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라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출액증가율의 경우에는 비모수검정인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 Rank Sum Test)에서 취약계층고용비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지원금비율은 취약계층고용비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취약계층자채고용비용의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성과의 차이분석 결과로, 취약계층자채고용비용의 높고 낮음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 4〉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의 차이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단위 : %)

변수	집단구분	표본 크기	평균	표준 편차	T검정 (t값)	윌콕슨 순위합(Z값)
DR	SVD = 0	110	48.33	24.60	-1.36	-1.31
	SVD = 1	116	52.84	25.21		
ROE	SVD = 0	110	24.27	48.98	0.18	-0.57
	SVD = 1	116	22.90	62.85		
SGR	SVD = 0	110	29.77	82.00	-1.45	-2.68***
	SVD = 1	116	138.20	800.90		
ATR	SVD = 0	110	320.80	244.20	3.23***	3.23***
	SVD = 1	116	232.20	155.60		
SFR	SVD = 0	110	25.06	30.82	-5.35***	-5.51***
	SVD = 1	116	61.37	65.94		

1) 전체표본크기 : 226개 기업/연도

2) DR : 부채비율, ROE : 자기자본순이익률, SGR : 매출액증가율, ATR : 총자산회전율, SFR : 정부지원금 비율, SVD :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이 중위수보다 높으면 0이고 아니면 1

3)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표 4>에서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의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라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금비율은 모든 검정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매출액증가율의 경우에는 취약계층고용비율과 반대로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자산회전율도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회전율 등의 경우에 취약계층고용비율과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므로, 경제적성과에 있어서 두 변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설의 검정

<표 5>는 가설 I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는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을 검증하기 위해서, 취약계층고용비율,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과 취약계층 자채고용인원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제적성과를 독립변수로 정의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형Ⅱ와 모형Ⅲ의 F값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종속변수로 정의한 모형Ⅰ의 F값은

유의하지 않으며 수정결정계수도 음(-)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모형 I 은 계량경제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회귀모형임을 보여준다.⁵⁾ 또한 <표 4>의 모든 회귀분석에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최대 1.2를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5>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text{모형 I : } VR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beta_5 SFR + \epsilon$$

$$\text{모형 II : } SVR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beta_5 SFR + \epsilon$$

$$\text{모형 III : } SV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beta_5 SF + \epsilon$$

구분	모형 I (종속변수 = VR)		모형 II (종속변수 = SVR)		모형 III (종속변수 = SV)	
	회귀계수 (t값) ^a	표준화 계수	회귀계수 (t값) ^a	표준화 계수	회귀계수 (t값) ^a	표준화 계수
절편	포함	—	포함	—	포함	—
DR	-0.0032 (-0.07)	-0.004	-0.1598 (-1.66)*	-0.098	-0.1804 (-1.27)	-0.084
ROE	0.0109 (0.49)	0.033	-0.0033 (-0.08)	-0.005	-0.0126 (-0.20)	-0.013
SGR	0.0019 (0.89)	0.060	-0.0031 (-0.76)	-0.045	-0.0039 (-0.65)	-0.042
ATR	-0.0026 (-0.42)	-0.030	0.0580 (4.79)***	0.298	0.0353 (2.05)***	0.137
SFR	0.0005 (0.02)	0.002	-0.3441 (-7.58)***	-0.466		
SF					0.00002 (2.73)**	0.180
F값	0.25		14.08***		2.88**	
$\bar{R}^2$	-0.0170		0.2252		0.0401	

1) 전체표본크기 : 226개 기업/연도

2) VR : 취약계층고용비용, SVR : 취약계층자채고용비용, SV : 취약계층 자채고용인원, DR : 부채비용, ROE : 자기자본순이익률, SGR : 매출액증가율, ATR : 총자산회전율, SFR : 정부지원금비용, SF : 정부지원금

3)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4) VIF값은 모두 1.2이하

앞에서 밝혔듯이 모형 I 의 경우에 F값은 물론 회귀계수 중 유의한 값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성과(재무비율들과 정부지원금비용)가 취약계층고용비용(= VR)에 미치는 영향은

5) 취약계층고용비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I 은 계량경제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이유는 선남이 · 박능후(2011), 김숙연 · 김선구(2016), 홍효석 · 김예경(2016), 전은영 · 변병설(2017)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사회적성과의 대용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성과의 대용치로 취약계층자채고용비용을 처음으로 사용한 모형 II 의 적합성을 보여줌으로써 선행연구들과 차별화 하고자 하였으며, <표 6> 이후 분석에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부적합한 모형 I 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숙연·김선구(2016)와 홍효석·김예경(2016)에서 정부지원금이 취약계층고용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지원금이 비율정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모형Ⅱ은 취약계층고용비율 대신에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것으로, 연구 모형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부채비율($=DR$)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며 총자산회전율($=ATR$)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위험에 대한 부담으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며, 총자산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여력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ROE$)과 매출액증가율($=SGR$)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상당부분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차별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형Ⅱ에서 예측과 다르게 정부지원금비율($=SFR$)이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SVR$)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형Ⅲ에서 정부지원금($=SF$)이 취약계층 고용인원($=SV$)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김숙연·김선구(2016)와 홍효석·김예경(2016)에서 정부지원금이 취약계층고용비율($=VR$)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지원금 대신 비율정보인 정부지원금비율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취약계층고용비율 대신에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정부지원금이 많은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효과로 취약계층고용비율도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이 정부지원금을 종속변수처럼 비율정보인 정부지원금비율로 변경하여 분석하였다면, 모형Ⅰ처럼 정부지원금비율은 취약계층고용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원금비율이 증가하여도 취약계층고용비율은 변동하지 않으나,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은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숙연·김선구(2016)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성과 및 성장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처럼, 정부지원금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립성이 약화되어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를 요약하면, 경제적성과의 증가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고용비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수익성과 성장성보다는 재무위험이 낮고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기업일수록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금이 많아도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과도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 스스로 취약계층을 고용하려는 자립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외부의 지원효과인 정부지원금보다는 기업내부의 노력인 경제적성과가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인 취약계층의 고용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은 가설Ⅱ(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도가 사회적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표 5>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된 모형Ⅱ를 기업규모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 결과이다. 본 연구는 <표 5>와 선행연구들에서 규모효과에 의해 연구결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모형Ⅱ에서 모든 변수를 비율정보로 정의하여 규모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표 6>처럼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추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규모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의 구분은 총자산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6>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성도가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

$$\text{모형Ⅱ} : SVR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beta_5 SFR + \epsilon$$

구분	기업규모가 큰 집단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	
	회귀계수 (t값) ⁰	표준화계수	회귀계수 (t값) ⁰	표준화계수
절편	포함	—	포함	—
<i>DR</i>	0.1469 (-2.45)**	-0.2220	-0.0558 (-0.43)	-0.0350
<i>ROE</i>	0.0674 (-0.05)	-0.0047	-0.0353 (-0.64)	-0.0542
<i>SGR</i>	0.0414 (-0.35)	-0.0316	-0.0020 (-0.52)	-0.0418
<i>ATR</i>	0.0263 (2.35)**	0.2125	0.0679 (5.07)***	0.4301
<i>SFR</i>	0.1772 (-3.35)***	-0.3145	-0.2711 (-5.56)***	-0.4536
F값	3.75***		10.48***	
$\bar{R}^2$	0.1067		0.3030	

- 1) 표본크기 : 기업규모가 큰 집단(=116개 기업/연도),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110개 기업/연도)
- 2) 기업규모 : 총자산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구분, *SVR* :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 *DR* : 부채비율, *ROE* : 자기자본순이익률, *SGR* : 매출액증가율, *ATR* : 총자산회전율, *SFR* : 정부지원금비율
- 3) ***, **는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 4) VIF값은 모두 1.2이하

<표 6>에서 기업규모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 모두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표 5>의 모형Ⅱ처럼 총자산회전율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정부지원금비율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다만,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의 부채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전체집단 및 기업규모가 큰 집단의 부채비율이 유의한 음(-)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 기업규모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에 대한 부채비율의 차이를 T검정과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큰 집단의 부채비율의 평균값은 55.27%로 기업규모가 작은 집

단의 평균값인 45.78%보다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기업규모가 큰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 내에서 부채비율의 차별성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제외하면, 전체표본과 기업규모를 구분한 분석들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므로, 기업규모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도 연구결과가 강건성(Robustness)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업규모의 구분기준을 총자산 대신에 매출액으로 대체하여 <표 6>을 재분석하였으나, 회귀계수의 차이만 있을 뿐 유의성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가설Ⅲ(인증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도가 사회적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다.)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형Ⅱ를 일자리제공형과 나머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 결과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표 1>에서 전체표본의 75%를 차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인증유형별 경제적성도가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

$$\text{모형Ⅱ : } SVR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beta_5 SFR + \epsilon$$

구분	일자리제공형		비일자리제공형	
	회귀계수 (t값) ^p	표준화계수	회귀계수 (t값) ^p	표준화계수
절편	포함	—	포함	—
<i>DR</i>	-0.1443 (-1.19)	-0.0842	-0.2048 (-1.29)	-0.1465
<i>ROE</i>	-0.0660 (-1.15)	-0.0830	0.0819 (1.24)	0.1444
<i>SGR</i>	-0.0045 (-0.98)	-0.0685	0.0095 (0.75)	0.1038
<i>ATR</i>	0.0597 (4.19)***	0.3078	0.0613 (2.57)**	0.3096
<i>SFR</i>	-0.3399 (-5.98)***	-0.4256	-0.4553 (-5.15)***	-0.7396
F값	9.42***		6.43***	
$\overline{R}^2$	0.2003		0.3263	

1) 표본크기 : 일자리제공형(=169개 기업/연도), 기타유형(=57개 기업/연도)

2) *SVR* :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 *DR* : 부채비율, *ROE* : 자기자본순이익률, *SGR* : 매출액증가율, *ATR* : 총자산회전율, *SFR* : 정부지원금비율

3) ***, **는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4) VIF값은 모두 1.2이하

<표 7>에서 일자리제공형과 비일자리제공형은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인 <표 5>처럼 총자산회전율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정부지원금비율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두 집단 간에 연구결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일자리제공형의 정부지원금비율의

표준화계수는 -0.7396 으로 일자리제공형의 표준화계수인 -0.4256 보다 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일자리제공형이 비일자리제공형보다 정부지원금비율의 음(-)의 영향력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지원금은 일자리제공형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8>은 가설Ⅳ(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는 정부지원금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정부지원금비율로 정의하고 독립변수를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회전율로 정의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기업규모를 추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표 6>처럼 기업규모를 구분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정부지원금이 어떤 경영성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8> 경영성과가 정부지원금비율에 미치는 영향

$$\text{모형Ⅳ : } SFR = \beta_0 + \beta_1 DR + \beta_2 ROE + \beta_3 SGR + \beta_4 ATR + \epsilon$$

구분	전체		기업규모가 큰 집단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	
	회귀계수 (t값) ⁰	표준화 계수	회귀계수 (t값) ⁰	표준화 계수	회귀계수 (t값) ⁰	표준화 계수
절편	포함		포함		포함	
<i>DR</i>	$-0.2526 (-1.78)^*$	-0.114	$-0.1734 (-2.25)^{**}$	-0.202	$-0.0312 (-0.12)$	-0.011
<i>ROE</i>	$-0.0016 (-0.02)$	-0.001	$-0.0457 (-1.27)$	-0.114	$0.0857 (0.78)$	0.078
<i>SGR</i>	$0.0108 (1.76)^*$	0.113	$0.0523 (2.42)^{**}$	0.216	$0.0070 (0.90)$	0.086
<i>ATR</i>	$0.0656 (3.78)^{***}$	0.248	$0.0243 (1.75)^*$	0.157	$0.0345 (1.30)$	0.130
F값	5.64^{***}		3.70^{***}		1.03	
$\bar{R}^2$	0.0762		0.0859		0.0012	

- 1) 표본크기 : 기업규모가 큰 집단(=116개 기업/연도),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110개 기업/연도)
- 2) 기업규모 : 총자산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구분, *SFR* : 정부지원금비율, *DR* : 부채비율, *ROE* : 자기자본순이익률, *SGR* : 매출액증가율, *ATR* : 총자산회전율
- 3)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 4) VIF값은 모두 1.1이하

<표 8>에서 전체집단과 기업규모가 큰 집단의 경우에 부채비율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고, 매출액증가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은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숙연·김선구(2016)와 홍효석·김예경(2016)에서 정부지원금이 경제적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나타낸 결과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인과관계가 반대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특히, 기업규모가 큰 집단의 경우에 재무위험

이 낮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금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영성치가 좋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치가 사회적성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제적성치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자산회전율과 정부지원금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성치인 취약계층고용비율,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 취약계층 자체고용인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위해서 규모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성치가 사회적성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인증유형의 차이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도 추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성치(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회전율)가 정부지원금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제도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치가 사회적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성치는 사회적성치인 취약계층고용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성치인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성치 중 부채비율과 정부지원금비율은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총자산회전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성치의 향상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증가시키지 못하며, 재무위험이 낮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하는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취약계층을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치가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큰 집단과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 간에는 부채비율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규모효과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인증유형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치가 취약계층자체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제공형과 비일자리제공형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인증유형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가 정부지원금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은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회전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큰 집단은 전체집단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영성과는 정부지원금비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시된 사회적기업들의 실제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을 약화시켜 자체적인 취약계층 고용을 감소시킴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취약계층고용비율보다는 취약계층자채고용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일수록 정부지원금이 경영성과를 통해서 지원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정부지원금제도는 좀 더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율 공시된 표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전체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료가 축적된다면 일반화를 위해서 추가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경제적성과를 일반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비율들로 정의하였으나,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일반기업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논문의 주제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숙연 · 김선구. 2016. “사회적 기업 특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0권 제4호 : 55-73.
- 김이배. 2012. “IFRS하 재무제표분석”. 국제경상교육연구 제9권 제4호 : 85-109.
- 김희철. 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7호 : 1797-1812.
- 박해욱 · 조성의. 2015. “사회적 기업에서 기업가 특성 및 역량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10권 제2호 : 95-115.
- 선남이 · 박능후. 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2호 : 141-164.
- 이용탁 · 주규하. 2014. “사회적기업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1권 제3호 : 341-356.
- 이형배 · 전규안. 2016. “소득률 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125-160.
- 장영란 · 홍정화 · 차진화. 2012. “사회적 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2호 : 175-207.
- 전은영 · 변병설. 2017.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9권 제2호 : 69-96.
- 지승민 · 박종일 · 나경아. 2017. “상장여부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기업신용등급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 63-110.
- 최용용 · 김선화. 2016. “경영자의 사적소비와 이익조정과의 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89-123.
- 최조순 · 강병준. 2012. “조직 유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 401-420.
- 최준규. 2012. “사회적 기업 성과에 관한 정책도구 효과 -지역형 비사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홍근 · 유연우. 2013.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례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 351-378.
- 한영규. 2016. “사회적 성과, 조직형태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효석 · 김예경. 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 경제적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16권 제1호 : 1-29.
- Aranya, N. Kushnir, T. and Valency, A. 1986.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Male Dominated Profession, *Human Relations* 39 (5) : 433-448.

- Blau, G. J. and Boal, K. B. 1987. Conceptualizing How Job Involve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ffect Turnover and Absenteeis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 (2) : 288–300.
- O'Reilly, C. and Chatman, J. 1986.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Attach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3) : 492–499.
- Rai, A., R. Patnayakuni and N. Seth. 2006. Firm performance impacts of digitally enabled supply chain integration capabilities. *MIS Quarterly* 30 (2) : 225–246.
- Yao, Y., J. Palmer and M. Dresner. 2007. An inter-organizational perspective on the use of electronically-enabled supply chains. *Decision Support Systems* 43 (3) : 884–896.

A Study on Social Performanc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 Funds

Kyoungok Yun^{*} · Heejeong Son^{**} · Oungrak Oh^{***}

—〈Abstract〉—

This study has prov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s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erformance, and analyzed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relationship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erformance depending on differences in firm size and authentication type. Additionally, we researched about what kinds of effects do social enterprise's management performance have on government funds.

To prove this, the study period is from 2007 to 2015, and analyzed 226 companies/yearly social enterprises as a sample.

The major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are ; firstly, we analyzed effects that social enterprise's economic performance have on social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is, it represented that self employment rat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is low as debt ratio and the rate of government funds are high, but it was analyzed that self employment rat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is high as asset turnover ratio is high. On the other hand, it represented that the economic performance don't have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rat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sis of influence that difference of firm size and authentication type have on the economic performance's relevance of social performance, it represented that both of them don't have a big influence. Finally, as a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influence of social enterprise's management performance on the government funds, it represented that self employment rat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gets low when debt ratio gets high, and self employment rat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gets high when sales growth rate and asset turnover ratio are high.

The study has a meaning on showing the effects that social enterprise's economic performance have on social performance and the influences which social enterprise's management have on government funds by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announced on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Key words〉 social enterprise, economic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government funds, self employment rat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chenghac@naver.com, First Author

**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Co—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oor@ssu.ac.kr, Corresponding Author